社 說

정치를 가늠하는 국민의 '의식혁명'

—— 제14대 총선 결과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비교적 깨끗한 선거였다고 평가한 14대 국회의원선거는 사실은 불법과 탈법으로 오염된 선거였다. 비교적 깨끗했다고 하는 평가가 어떤 기준에서 판정되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아마도 명목상의 여소야대에 대한 자위의 한 가닥일 것이다.

그러나 14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평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자당의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이다. 모든 언론매체는 말할것도 없고 일반적인 여론은 민자당의 패배, 또는 대패, 참패라는 말로 민자당의 선거결과를 평가한다. 그러나 사실 민자당은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했다고 하는 평가가 올바른 것이다. 민자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총선 결과를 왜 대승이라고 하는가라는 의문이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잠시만 숙고해 본다면, 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은 대승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집권여당이라고 자부해온 민자당, 또는 그 민자당을 기반으로 하는 현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이룩해 놓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해답은 쉽게 나온다.

민자당정권의 본질을 따지고 싶은 흥미는 없다. 그러나 흔히 거론되는 경제적 위기, 물가고, 민생치안, 환경문제 그리고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터진 안기부직원의 흑색 선전, 군부재자 투표의 부정에 대한 의혹 등, 피부에 와 닿는 문제에서 민자당과 민자당을 통솔해온 현정권은 실정을 거듭했을 뿐, 어느 하나도 근본적인 해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해결책조차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이 국민의 입장에서 엄격한 평점을 했다면, 당연히 민자당은 급부상 했다고 하는 국민당보다도 그 의석이 적어야 마땅하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민자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 괴멸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민자당이 무소속 몇 명을 영입하는 것으로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갖게 되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총선결과를 갖게 되었다면, 민자당은 국민의 참으로 부끄러운 관용에 의해 소생한 것이고 소생 자체가 '대승'인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수치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패배라고 하는 평가의 척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평가의 척도는 집권세력의 것이다. 과반수 이상을 자부한 집권세력의 입장을 척도로 삼을 때, 비로소 민자당의 패배라는 평가기준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권당의 평가기준을 받아들였을 때, 선거결과가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보여준 선거가 이번 선거이며, 이것이 바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진보세력이 기성정치권에서 교두보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당 자체가 해체되는 비운을 겪게 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집권세력의 척도가 모든 정치적 평가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이 국민 나름의 평가기준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혁명'이 절실하다는 교훈을 남겨준 것이 이번 총선의 유일한 수확이라는 평가는 슬프기는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실정 통치도덕의 문제

—— 경제난국 수습대책에 부쳐

14대 총선의 회오리 바람이 지나고 경제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선거 직후 한국은행총재에 조순 전 부총리를 임명한 것에서도 다급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마도 선거 패배의 큰 요인이 경제 실정(失政)임을 새삼 깨달은 모양이다. 사실 '되는 것도 없고 되지않는 것도 없던 6공'에서 이룩한(?) 경제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새삼 그 면면을 지적할 것도 없이, 종잣돈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했기에 경제 난국으로 들어섰는지 들여다 볼 수록 암담할 뿐이다.

그나마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자'는 60년대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숨이 턱까지 차 헉헉거리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일더하기 운동을 시키는 정도였다. 이른바 노동량으로 임여가치를 늘여 경제의 빈 구멍을 메꾸려는 작태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임금제 역시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동대가를 최소화 시켜 그 잉여분으로 주름살을 펴겠다는 이야기니 이래저래 만만한 것이 근로자다. 그러나 한 경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따르지 못한 적은 88년 한해정도 였다고 한다. 도대체 근로자의 노동량으로 시비를 거는 일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사실 한 나라의 경제문제를 단지 경제적인 면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정치 경제 문화는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연동되어 있으며 무수한 조합증에서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면에서 이번에 한은 총재에 임명된 조순씨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격에 맞지 않는다는 하마평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람막이'를 자임한 이면에는 여러 의미가 합축되어 있는 듯하다.

경제를 판독하는 눈을 인정받는 그가 말한 바람을 알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관행상 재무부의 하위기관으로 취급받던 한국은행은 정부의 요구대로 발권(發券)을 하는 등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유독 그가 통화안정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서야 그것을 막겠다니 두고볼 일이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작금의 경제난국의 책임 소재를 점검하는 일이다. 통화관리와 경제운용의 틀을 잡는 초석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은행이라고 보면 그동안 그 부문의 역할에 한국은행이 충실하지 못했음은 일일이 지적할 필요가 없다. 기반이 흔들리니 나라의 살림살이가 중구난방임은 당연지사다.

경제논리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우선 순위를 두는 한 경제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른바 선거망국론의 뒤에는 건강한 경제를 교란시키는 돈의 흐름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그 대부분을 정부 여당이 저지르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도 자금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는 정도(正道)가 있음은 물론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상장회사의 연쇄부도 상황도 정부의 그릇된 토지정책에 기인한 버블경제의 후유증이며 이는 경제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통치의 도덕에 관한 문제다.

열심히 일해 잘먹고 잘살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일하는 자와 배부른 자가 다를 때 누가 일을 할 것인가. 땀흘리는 근로자에게 그동안의 실패를 넘길 생각은 그만하고 진정 경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정치가 딴지를 거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失正이 失政을 부르는 법이다.

매체비평

'부재자 투표부정' 의도적 축소보도

전국을 뒤흔들던 제14대 총선이 끝났다. 더불어 '금뱃지'보도에 열심이었던 각 신문들의 열기도 좀 식어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언론은 자정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만큼이나 언론의 선거보도도 중요시되어 '선거보도감시 연대회의' 등이 꾸려져 많은 활동을 벌였지만 각 언론은 선거막판에 치달을수록 그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여당에게 악재가 될 일을 숨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만일 압승을 거두게 된다면 언론의 덕분이다'라는 말은 언론의 태도를 엿볼수 있게한다.

지난 23일 한겨레신문 1면에는 '군 공개투표등 대대로 선거부정'이라는 제목으로 22일밤 공명선거실천 시민협의회(이하 공선협) 전국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기사화했다.

이날 육군 9사단 28연대의 소대장 이지문(24)중위가 회견을 통해 "중대별로 실시된 이번 군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남북대화를 하려면 30% 지지 가지고는 북한이 상대로 삼지 않으려하니 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정신교육이 있었으며 단위부대에 따라서는 중대장이나 인사계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찍도록 하는 등 공개 기표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일보도 사회면에서 이중위의 기자회견 사실을 보도하였지만 대부분의 일간지에서는 기자회견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날 24일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부재자 투표는 공정선거를 위해 엄격히 관리 감독되어야한다는 내용을 지적한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신문에서는 '군부재자투표 부정 있을수 없다'는 제목으로 최세창국방부장과의 반박성명을 게재하고 이중위와 동석한 학군장교들의 말을 인용 '선거 얘기를 나눈적 없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선거당일의 이 두 기사는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여주고있다.

개표가 시작되고 부재자투표함 개표결과에 따라 후보자들의 당락이 결정적으로 좌우되자 동아일보(25일 22면), 한겨레신문(17면)등 거의 대부분이 부재자 투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단순히 광역때보다 18% 높아진 민자당 부재자득표율과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야당의 표정을 단순히 기사처리했다. 단지 한겨레신문만이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내용이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무근이 아니라 실제로 군내에서 부정선거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는 기사와 함께 사설에서 야당·시민단체·선관위가 공동으로 군부재자 투표를 협동조사하라고 보도했다.

군부재자 공개투표 사건은 투표이틀전인 22일 이지문중위의 양심선언을통해 한겨레신문 23일자에 보도 되었으나 중앙 4대일간지나 그밖의 신문은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선거이후에도 부재자투표시비나 안기부선거개입문제에 대해 언론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오랜 병례로 지적되어왔던 부재자투표, 관권개입등에 대해 그 철저한 배후를 가리고 해결방안을 찾기는 커녕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언론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해야할일은 그다음 대권행방을 추측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철저하게 가려내어 다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언론이 집권층과 공생하는한 국회의 여소야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것이다.

〈송보영 記者〉

법은 '비현실' 국민은 '무의식'

—— 14대 총선에서 본 선거법의 실태

사론

인간은 "관계"의 연속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계"는 이어짐이고 이어짐을 위해서 상호작용의 요체인 "참여"라는 요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사회는 참여라는 농도에 따라 역사의 길이 갈라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참여의 농도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말들이 밤하늘의 별들 만큼이나 많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정확한 정의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자도, 재벌정치가도, 문민정치가도 자신스스로 독재를 자처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의 역사"저자인 시드니 후크 교수는 "민주주의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를 가장한 전체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윤리는 투쟁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후크 교수의 결론이다. 여기서 투쟁은 참여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처럼 민주사회 존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간 존엄성을 위해, 사회번영을 위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당연한 귀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적 환경적 비적합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땅에 직접민주주의적인 민주사회를 갈구하는 이유 또한 대의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에도 반민주의 함정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표방하는 이 땅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참여형태는 투표라는 행위로 모든 민주정치라는 의미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투표라는 현실적인 언어에 집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입법부가 정한 법과 질서에 복종함으로써 투표라는 참여행위에 임하게 된다. 법이라는 굴레속에서 우리의 참여행위를 실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올바른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지 되씹어보고,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총체적 분위기가 이처럼 중대한 참여라는 행위 실현을 위해 일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참여 행위의 자유스러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거법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자유스러운 참여를 최대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렀을 때 선뜻 동의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피선거권자의 선거운동 참여의 차이 즉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참여의 차별성이라든지 후보자간의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차별성 등은 결국은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에 대해 참여라는 행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선거라는 장에 공정한 참여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을 충분히 알릴 시간의 촉박성으로 인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충분한 인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현혹적이고 편파적인 매체에 의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참여행위를 간과하게 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저지르는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선거법은 선거비용의 비현실적인 액수규정으로 인하여 자금 흐름의 왜곡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선거비용은 제한규정의 애매모호함에 의하여 선거비용 시비를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14대 총선의 예를 볼때, 가장 빈번하고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면, 과중한 세과시를 위해 무차별 당원 확보에서 오는 인격적 무시성, 불법 조직을 통한 조직적 선거운동, 공조직의 암묵적 선거운동, 흑색선전의 공공연한 자행 등 이외에도 많은 위반사항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선거법 자체가 공정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기 때문만 아니라 졸속 개정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의 자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선거상의 문제점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죄의식의 결여라든가, 관리·감독할 집행부가 권력 연장을 위해 의도적 교사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편파적 시각성, 그리고 헌법구성력을 갖춘 국민의 수임기구인 선관위가 존재하는 데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이 목청을 돋우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도 부끄러운 현상의 출현은 무용지물론이 대두되고 있는 선관위의 나약성과 방관적 불공정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선거법은 무엇보다도 선거법의 공정성과 현실성, 민주성의 미비로 위헌의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고, 또한 모든 조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비현실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제14대 총선을 통하여 볼 때, 개선되어야 할 점은 선거행위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호별방문 허용이라든가, 개인연설회, 정당연설회 증가 등을 통해 선거운동기회의 확대와 동시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선거자금의 규정, 불법사항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처벌과 금지 규정의 구체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외형적인 선거법의 현실적 민주적 개정도 중요하지만, 선거라는 신성한 참여의 장을 모든 유권자와 후보자가 중요한 인간사회 존립의 기틀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거는 고인물을 걸러내고 새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무리 금권과 타락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관계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인간은 관계라는 이어짐이 단단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젊은 유권자들은 냉소주의가 우리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참여행위가 올바르고 능동적일 때만이 이 사회가 찬란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 병 식
〈본교 박사과정·행정학〉

비민주적 정치문화로 공정성 상실
유권자 참여보장 위한 법 시행해야

(고) (황) (만) (평)

"먹어나 봤나! 무소속"

4월의 문화달력

물소리는 모두 다르다!

물소리
여러분은 몇 가지의 물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옛날 어느 선비는 똑같은 강을 아홉번 건넜던
체험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내가 두려웠을 때는…
내가 평온했을 때는…"
그 선비는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너면서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하찮은 잡풀에서도 여러가지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감도는 4월
캠퍼스의 4월은
색다른 체험을 위한 발상 대전환의 시간입니다.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행사를 알리기 위해
現代그룹이 제공해 드리는 본란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가 있으면 행사 전달 25 일까지
現代그룹 文化室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746-3347) 로 알려주시면 성심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現代

연 연극 무 무용 전 전시 행 행사 음 음악 영 영화 공 공연 기 기타